

'99년 전자산업 통상환경 전망 (II)

<본회 통상협력과>

차례

- I. 세계경제 전망 및 최근의 통상환경
- II. 국제무역관련기구의 최근 동향과 전망
- III. 주요 다자협상 현황과 전망
- IV. 1999년 EU 통상환경 전망
- V. 1999년 미국 통상환경 전망

IV. 1999년 EU 통상환경전망

1. 반덤핑 현황과 전망

가. 1998년 반덤핑조사

EC집행위는 역내 산업의 반덤핑제소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멘스와 일부 회원국들이 가세한 한국산 DRAM 케이스가와 같은 집행위의 의중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동케이스에서 집행위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제소는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제소를 기각했다.

더욱이 1998년은 1997년에 비해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적으며, 이중 한국과 관련된 조사는 5건으로 1997년 6건에 비해 한건 적은 것이나 전자관련 케이스는 한건도 없다.

나. 1999년 전망

- 자동차용 CDP

현재 진행중인 동케이스는 산업피해 측면에서의 설득력 부족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덤핑과 산업피해에서 보다 심각한 태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제소대상국가 선정에 실패한 차별적 제소라는 입장이며, 한편 이와 같은 입장이 공식화될 경우 EU산업은 한국이외에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신규 제소 가능성이 상존한다.

■ DRAM

제조사인 지멘스사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한 재차 제소를 신청치 않을 방침을 표명하였으나, 당초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만을 대상으로한 제소에 반대한 집행위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규제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며, 또 다른 변수로서 지멘스의 반도체 사업부문 매각 가능성과 어느 기업이 이를 인수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저울

유럽내 전자저울업체들은 싱가포르에 대한 종료재심(Sunset Review) 요청서에서 한국산 수입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덤핑혐의가 발견될 경우 다시 제소할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형 전자저울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대형 콘덴서

EC집행위는 확정판정 계산 결과를 조사관련자들에게 송부하고 이사회에 확정관세부과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정부는 미국내 현지 공장인 마쓰시타를 위해 강력한 로비를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동사에 대한케이스는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업체들은 한 업체도 조사를 받지 않아 잠정판정 결과치인 76.2%를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팩스기기

확정판정 당시 집행위는 회원국 과반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조사시 산업 피해를 입증

한 일본과 싱가포르에 대해 조속한 재심을 개시하여 산업피해 결정내용을 재평가해 주기로 약속한바 있다.

관련재심은 확정판정일인 98년 4월 28일 이후가 되며, 한국과 관련 집행위는 확정판정 2년이후 중간재심을 개시키로 결정한바 있어 오는 2000년초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1999년이 조사대상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공식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 기타 반덤핑 제소설은 휴대폰과 비디오테이프가 있으며 이중 비디오테이프는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제심

한국과 홍콩산 3.5" 플로피디스크(94.9.11 확정판정)의 재심이 1999년 하반기중 있을 예정이다.

지난 98년 10월 중국, 대만, 일본산에 대한 일몰재심이 개시된 것을 감안하면 한국산에 대해서도 제소자측의 제심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5년 4월 부과된 CTV도 일몰제심기간이 다가오는데 현지업체의 제소가 있을시 2000년 1/4분기중 재심이 개시될 것이며 이 경우 1999년의 대부분의 기간이 조사대상이 될 것이다.

라. 상계관세

상계관세조사 절차가 1998년 크게 늘었으며 한국 관련 케이스는 두건이며, 이러한 증가는 동남아국가들의 환율인상도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율인상으로 덤핑혐의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일단 집행위가 조사결과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하면 수출국의 여타산업도 동일한 보조금의 수혜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도산 항생제에 대한 반보조금 잠정관세부과가 좋은 예로써, 이후 몇 개의 반보조금조사가 개시되어 그중 한건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이미 부과되었다.

2. 다자협상 현안과 전망

가. 경쟁법

EC집행위는 수직적 협정(vertical agreement)에 대한 블록예외(Block exemption)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한 제안서를 이사회에 상정했으며 동제안은'99년 1/4분기중 채택되어야 하며, 집행위는 이때 신규 일반블록예외에 대한 案을 준비한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신규제도 하에서는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단일 일반블록예외(자동차 제

외)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독점적 유통협정이나 선택적 유통협정, 프랜차이즈협정 등에 관한 부문적 블록제외의 적용은 더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집행위는 경제주체에 대한 현재의 법적 접근을 변경하는데에 단호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은 블록제외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WTO 차원에서 무역과 경쟁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무위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내국민대우, 투명성, 최혜국대우 등의 기본적 WTO 원칙을 경쟁정책에 반영
- WTO 회원국간 협력과 대화 증진
- 경쟁정책은 국제무역 증진 등 WTO 목적달성에 기여

나. TRIPs(무역관련 지적 소유권)

2000년에 다시 검토기로 한바 있는 TRIPs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협정의 수정이나 개정의 범위를 협의해야 하는데 다음의 문제점들이 협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허문제 : 일부 회원국들이 특허범위 확대를 요청할 것으

로 예상

-2000년 1월 이후 TRIPs협정 Article 64.3에 따른 모라토리엄 연장 허용 : 선진국들은 “특정조치의 기타 회원국 적용”, 또는 “여타 특정상황의 존재” 등에 기인한 이익 침해(또는 무효화)의 제소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유예선언)을 2000년 1월 1일부로 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또는 200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장경제로 전환국가들의 TRIPs 협정이행 : 1999년에 주요 문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WTO회원국들은 이들 국가들이 TRIPs 이행을 위해 취해야 할 정책과 관련한 정보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다. 비특혜원산지규정 통일

원산지규정위원회는 당초 1998년 7월까지의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1999말까지로 신규일정을 확정했다.

1999년중 WCO 실무작업이 지속될 것이나 일부 협상참여자들이 지적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의 부족, 협상의 복잡성 등은 협상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라. 투자규정

1998년 12월 3일 개최된 투자정책 관련 고위급 회담에서 OECD내에서의 다자간투자협정 협의를 중단기로 하고 추가적인 분석작업과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WTO 차원에서 TRIMS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협정에 서명했던 WTO 회원국들이 2000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단계적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TRIMS 위원회는 1999년도 동 문제에 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3. EURO貨

유로화가 1999년 1월 1일부로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태리,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지움, 아일랜드, 스페인 등 11개국이 참여하며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은행권과 동전은 2002년 1월 1일부터 통용되며 현재의 각국 화폐는 2002년 6월까지의 사용될 예정이다.

■ 유러화 도입의 의미

- 가격투명성 : 단일화폐도입은 유러화 경제권내의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해 줄 것이기에 가격차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개 참가국들의 화폐들이 단일화폐로 대체되어 유러권내의 환위험이 없어짐에 따라 투자 수익성이나 장기 수급계약 등이 환율변동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없어졌으며 외국업체들도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고 유러권내에서는 내수시장처럼 계약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직접적 효과로써 EC 회원국 화폐간 환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역내 기업들에게 매우 유익하게 작용하여 기업의 환위험 방어비용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러권내의 교역에서 단일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회계정리나 가격책정, 인보이스, 지불조건 등을 단순화 할 수 있다.

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수퍼 301조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효력이 만료됐던 수퍼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게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확인, 이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바세프스키 대표는 클린턴 대통령이 이와 함께 외국의 차별적 정부 조달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활시켰다고 덧붙였다.

수퍼 301조 부활 조치는 미국이 무역적자 급증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수입과 바나나 무역을 둘러싸고 각각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취해졌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수퍼 301조에 근거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가 국제 무역협정들을 위반하는 것이자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 절차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해 왔다.

미국은 지난 97년 10월 외국산 승용차 수입을 둘러싸고 한국을 '불공정 무역관행국'으로 지정, 수퍼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답변에서 자유무역과 공개 시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강조하면서 "일본과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덜 개방적"이라고 지적했다.

루빈 장관은 특히 "일본과 유럽은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자국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관측통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지난 93년 이후 처음으로 22억달러 흑자를 기록한데다 상이한 통계방식을 쓰는 미국측이 지난해 대한 무역적자를 80억달러로 계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가 수퍼301조 영향권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통상 및 경제환경

가. 개관

IMF와 WTO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의 세계 교역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는 예측하고 있으나 세계 GDP 성장이 1997년 4.1%에서 1998년 2.0%로 떨어진 상황에서 아직 1997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지는 미지수이다.

IMF에 따르면 1998년 9월까지 아시아의 수출이 7%, 수입이 16% 하락했으며 이는 8.5%의 수출과 19%의 수입감소를 겪은 일본의 영향이 매우 크다.

아시아가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금융위기를 극복할 경우 1999년은 매우 낙관적이다.

회복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와 달러화에 영향을 줄 경우 아시아국가들의 경제복구에 미국의

V. 1999년 미국 통상 환경 전망

1. 수퍼 301조 부활

99년 1월 26일 미국은 불공정 무역 국가를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통상법 수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살린 바세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일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서구시장 수요에 막대한 영향력을 초래하여 세계적인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위기가 미국경제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미국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반덤핑 등 무역규제조치 및 신규 보호무역법안 등과 강경대처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무역통계를 예로 들면 TV, VCR과 같은 전자제품의 수입급증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과의 통합무역수지는 97년 1월~7월까지 마이너스 18억불에서 98년 1월에서 7월 중 마이너스 130억불로 적자가 증가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법안 및 행정절차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무역불균형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 수입에 대한 문제는 단지 미국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호주 등에게도 자극을 주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클린턴 행정부와 연방준비위 등 현재 미국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작금의 미국경제 침체에 의해 조성된 위험을 주의깊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위는 미국의 최저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의 의지를 보여준바 있으며, 미국은 특

별히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없을 경우 아시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성장위주의 재정 및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위기의 예기치 못한 악화나 주식 폭락과 같은 급작스러운 변동이 없을 경우 1999년도 미국경제의 침체위험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나. 전자산업

■ 전자산업 동향

미국과 세계의 전자산업을 통해 전망되는 1999년도 미국 및 세계시장은 긍정적인 편이다.

3년간의 침체가 이후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시장은 1999년도에 9.1%의 매출신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가 2000년 15.2%, 2001년 18.2%의 성장세(미:SIA)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재고가 감소되고 있으며 자본지출과 수익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매출 침체의 최저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인텔사가 확인하고 있는데 동사는 1998년 3/4분기 당초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영업실적을 올린 바 있다.

미국 반도체협회(SIA)는 1999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차세대마이크로프로세서나

디지털신호처리기, 시스템칩, 통신 및 네트워크디바이스,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기타 신가전제품 등 신기술 개발품의 등장때문으로 보고 있다. SIA는 또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향후 수년 내에 회복되어 2001년 매출은 유럽을 능가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시장으로 부상하고 약 440억불의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메모리 시장 수요는 1997년도 34.8%의 매출 감소에서 1999년도 25%의 신장을 전망하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광전자시장은 성장을 유지하고, 디지털신호처리기와 안라로그제품, 디스크레이트, MOS 마이크로디바이스, MOS 로직디바이스 등은 1998년 침체를 벗어나 1999년 이후 2001년까지 성장이 예상된다.

유럽과 북미시장도 1998년 슬럼프를 벗어나 성장이 예상되며, 일본의 경우도 성장이 예상되나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장기전망은 1998년도 9월까지 15%의 감소를 보인 대아시아국가들로의 수출에는 당분간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이 기간중 인도네시아가 70%, 한국이 33%, 태국이 26%, 일본이 13%의 수입감소를 보였다.

■ 전자제품 수요

전자제품 경기의 상승전망의 일부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과 같은 내구성 가전제품과 휴대폰, 디지털TV, 첨단가전제품 등과 같은 제품의 수요증가를 근거로 한 것이다.

또한 시장은 중급제품이 감소하는 대신 고급제품과 저급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TV와 관련 부분품 및 기기 등은 가전제품의 신규 수요와 투자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범주와 시기는 미국내 시장진전 상황에 의존할 것이다.

일부 산업전문가들은 HDTV와 표준디지털TV 등의 높은 가격으로 말미암아 향후 수년간 이렇다할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TV나 DVD, 디지털비디오시스템 등의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기기들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의 증대로 신규전자제품의 구매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제품시장은 따라서 1999년도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나, 이러한 긍정적 전망은 아시아국가들에게 특히 해당되는데 이는 아시아가 이들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때만 가능하다.

SIA는 최근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연구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에 2천만불이 투자를 발표하고, 미국산업의 반도체 시장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칩체국면에 접어든 시기에도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3. 통상이슈 전망

가. 반덤핑조치

1998년 유럽과 미국은 한국산 칼라TV에 대한 반덤핑규제의 철회를 발표했다. 한국업체로서는 커다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며 이와 관련 유럽은 한국을 제외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또한, EU는 1998년 한국 및 일본산 DRAM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기각했는데 이는 제소자인 유럽전자부품협회(EECA)가 EC집행위의 압력으로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EECA는 IMF의 구제금융이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특별히 지원되지 않도록 IMF에 요구했다.

1998년은 특히 철강산업에 집중하여 한국과 여타 아시아국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제소가 많았는데 이와 관련 미국산업은 공격적이고도 잘 조직된 여론을 형성하고 광범위한 언론홍보와 대통령 및 고위관료 면담 등을

통한 로비에 적극적이었다. 미국의 철강업체들은 특히 한국 등 아시아산 덤핑수입으로 철강노동자의 50%가 실직했음을 주장하며 반덤핑조치외에 기타 보호주의적인 조치와 법안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은 한국 및 아시아산 철강수입품이 가장 큰 반덤핑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8년은 비록 전자제품수입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매우 적었으나 1999년 대 아시아 무역적자 확대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덤핑수입으로 인한 철강부문의 실업증가는 기타 아시아산 수입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1999년 전자부문의 긍정적 전망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등에 의해 반감될 수 있다.

특별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디지털 및 HDTV제품의 미국시장 성장이다. 1998년도 한국 및 일본, 대만산 CTV에 대한 반덤핑 조치 철회에 반대치 않은 것은 미국의 TV산업 특히 관련 노동조합이 아시아와 기타 해외산업으로 부터의 도전에 대해 역사적으로 공격적인 입장을 포기했다는 것으로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

1999년 미국의 HDTV 시장수요가 무역압력을 야기할 만큼 충분한지는 분명치 않으나 디지털TV를 포함한 일반TV와 칼라브라운관 그리고 기타 고부가

가치 관련 부분품들의 수입증가는 미국 산업의 새로운 무역 조치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능조치에는 2000년 1월 1일까지유효한 기존 반덤핑조치의 재심이나 아시아산 직수입 또는 아시아의 멕시코 투자 공장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제소 또는 기타 미국 무역법에 의한 제소 등이 있을 수 있다.

나. 아시아 금융위기

IMF는 아시아 위기로 인한 1999년도 세계경제 침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IMF는 한국과 태국이 보여준 경상수지흑자와 환율안정, 저금리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외환위기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1998년 8.7%(추정)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1999년은 평균 0.6%의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IMF의 예상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제한적이거나 아시아의 성장이 환율안정과 對달러 강세 그리고 교역량 유지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특별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아시아위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양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와 IMF가 갖고

있는 인식은 한국정부가 규제철폐와 재벌들의 구조조정, 부채비율감소, 핵심사업강화 등 외환위기를 불러온 구조문제 개혁에 상당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667개 무역관련 규제중 345개의 철폐계획과 1998년말까지 추가적으로 174개 규정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재벌구조조정과 부채비율감소 노력도 미국과 국제기구 등에 긍정적인 변화로 비춰지고 있다.

다. 입법

1998년도 105기 의회는 흑자에 산과 클린턴 스캔들 그리고 중간선거 등이 1998년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능가하였던 바 특별히 활동적인 해가 아니었다. 그러나 의회 양당의 핵심구조내에는 강력한 보호주의적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998년도 입안문제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와 일본, 브라질산 철강수입금지 요청안의 하원통과 문제가 있다. 동안은 비록 상원에서 거부되었으나 일괄법안의 일부로써 최종법안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철강산업내 보조금 존재여부를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동법안 아래 USTR은 한국의 철강보조금이 미국 산업에 부정

적으로 작용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정부가 포항제철에 압력을 넣어 내수판매의 경우 국제가격보다 30% 낮은 가격에 판매토록 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도록 했다.

하원 민주당 리더인 리차드게파트(D-MO)역시 철강수입품에 대해 201조(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토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최종 IMF 지원안에서도 한국산 반도체, 철강, 조선, 섬유 및 의류산업에 IMF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의회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로 최근 USTR 내부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로 하여금 의회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USTR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관련 정책없이 무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을 1999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예로서 국내 철강산업은 201조(또는 세이프가드)에서의 산업피해기준을 변경토록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개시했으며, 철강산업은 역시 반덤핑케이스에서 환율인상에 대응토록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산업에 대한 모든 수입품의 영향력을 누적할 수 있는 방안 등 여타 행정적 조치를 강구토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변화들은 비단 철강산업 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등 여타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련 미국 무역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국제무역에 대한 노동산업연맹(LICIT) 역시 해외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에 초점을 둔 301조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LICIT는 USTR이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는 과거 10여년간 일괄무역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왔으나 1999년 동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수출입 환경하에서 이는 모든 산업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WTO

미국 의회가 무역법안 처리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WTO 특히, 분쟁해결위(DSB)는 미국과 여타국의 과도한 보호주의조치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12월 한국산 DRAM에 대한 WTO 패널의 결정은 한국산업과 자유무역주의의 개가였다.

동결정은 미국의 주요 반덤핑 조치중의 하나인 DRAM케이스에 대해 현행 미국의 반덤핑명

령 철회 기준을 무용하게 했다. 패널은 미 상무성이 철회요청자에게 미래의 덤핑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입증의 의무를 전가한바 WTO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동결정은 또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일몰재심(Sunset Review)과 관련 절차의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패널결정은 미국의 반덤핑법과 행정관행들이 WTO 합의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전자부문 이외에 한국은 1997년 EU가 제소한 주세 케이스와 낙농제품에 한 세이프가드케이스가 있다.

주세문제의 경우 패널은 소주는 수입주류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바 유사한 주류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한국측은 1998년 10월 항소의향을 표명한바에 따라 1999년 1월하순 항소심 판정이 나올 것이다.

현재 미국이 EU의 바나나케이스와 관련 EU가 WTO 패널결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동 항소심 결정이 발표되고 결정의 이행시기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추가적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결론

1999년도 한·미간 전자교역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비록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을 갖고 있다 해도 이것이 미국 및 세계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는 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수요 특히 전자부문에서의 수요는 저인플레이와 실업을 그리고 연방예산 흑자, 건전한 주식시장, 성장지향적 통화정책 등과 어울려 1999년도 미국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의 규제개혁과 구조조정 노력은 한·미간 무역에서의 보호주의와 양자간 무역 마찰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아시아산 철강 및 전자수입 급증은 1999년도 신규 무역분쟁의 위협이 되고 있다.

워싱턴과 의회의 보호주의적 감정은 최근 들어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최근 제소된 철강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케이스는 미국 무역법의 보강 등 추가적 보호조치를 불러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지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클린턴대통령도 1999년 민주당내의 보호주의자들에 맞서는 것을 피할 수밖엔 없을 것이다.